

7·3 개각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친정체제 강화... 흔들림 없이 간다

노무현 대통령의 7·3 개각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인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규모로는 소폭 개각이지만 정부 정책라인의 핵심인 경제,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내각의 색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내용에서는 '쇄신'에 가깝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특히 경제, 교육부총리에 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함으로써 내각은 대통령의 정책철학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보다 공고한 진용으로 짜여졌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내각의 '친정체제' 강화를 통해 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국정장악력을 다시 최고 반환점을 돌아선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두 부총리 인선을 통해 임기말까지 경제나 교육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盧대통령 원칙주의 노선 고수할 듯 측근 전진배치 정책 누수 차단 의지

원칙주의 관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 정부 정책수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대통령의 최측근 정책참모이다. 노 대통령이 정부 출범 때부터 제반 정책의 기획과 입안, 집행에 관여했던 김 전 실장은 내각의 핵심 포스트인 부총리로 중용한 것은 임기 후반기 정책집행과정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당내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어 김 전 실장의 입각 반대 입장을 개진했고, 장관 임명 제청권자인 한명숙 총리도 당 일각의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뜻을 되돌리지

는 못했다. 김 전 실장은 그의 위상에 비취볼 때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 이상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권오규 정책실장의 경제부총리 기용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청와대 정책실장 발탁도 역시 노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관료를 중용한 케이스이다.

권 실장은 정부 경제관료 출신으로 개방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이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로 일하면서도 유럽의 사회대타협, 복지모델을 연구하는 등 사회정책적 마인드도 겸비해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참모이다.

임기 후반기 정책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측면에서 김 전 실장을 교육

부총리에 기용한 인선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개각의 시점을 7월로 택한 것은 지방선거 이후 분위기 쇄신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9월 정기국회를 새로운 진용으로 맞겠다는 뜻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내년 가을 정기국회가 내실있는 국회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가 임기중 사실상 마지막 '일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정책현안인 양극화 해소 및 한미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교육·국방·사법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각을 일사불란한 대외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재임 기간이 오래된데다 최근 부처 현안과 관련한 마찰음으로 인해 더심 확립에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무위원 20명중 호남출신 7명

청와대 수석 이상 5명

노무현 대통령의 7·3 개각으로 임명됨에 따라 참여정부 내각은 오랫동안 호남 인맥이 북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석급 이상 청와대 참모 진용에도 호남인맥과 영남인맥이 나뉘어 군현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신안)과 이용섭 행정자치부(함평), 이상수 노동부장관(여수), 장하진 여성부장관(광주), 여기에 장병만 기획예산처장관(곡성)까지 모두 5명이다. 여기에 김명곤 문광부장관(전북 전주)와 정

세균 산자부장관(전북 장수)까지 포함하면 호남 출신은 7명으로 국무위원을 출신지로 분류해 볼 때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영남 출신이 6명을 차지했는데 우선 김병준 교육부총리(경북 고령), 윤광웅 국방부장관(부산), 박홍수 농림부장관(경남 남해), 유시민 복지부장관(경북 경주), 추병직 건설부장관(경북 구미), 김성진 해수부장관(경남 통영)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석급 이상 청와대 참모 진용(14명)도 호남 인맥과 영남인맥이 각각 5명씩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선 장성 출신의 이병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전해철 명근 문광부장관(전북 전주)와 정

(진도), 정문수 경제보좌관(영광), 송하중 정책기획위원장(고흥) 등이 포진하고 있다.

영남 인맥도 경남 통영 출신의 변양균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이정호 시민사회수석(부산), 차의환 혁신관리수석(울산),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경남 진양), 서주석 안보정책수석(경남 진주)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3급 이상 참모진 149명 가운데 영남출신은 40명선에 육박하며 수석 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호남 출신은 30여명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제 '호남 소외론'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프로필

개방·경쟁 중시하는 시장주의자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권오규(54)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방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로 각인돼 있다.

실용적 사고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적 문제에서는 쉽게 타협하지 않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성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업무스타일도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매사를 간결하고 핵심위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권 실장의 풍부한 아이디어와 국제적 감각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강원 강릉(54)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중앙대 경제학 박사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 ▲재경부 차관부 ▲조달청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OECD 대표부 대사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정부 개혁정책 수립 '아이콘'

김병준 교육부총리

새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52)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한다.

행정도시, 부동산 정책 등 현정부 들어 수립된 주요 정책이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특유의 추진력과 돌파력이 발군이다. 이런 장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숨은 동력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현장감각도 탁월하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부분과 간사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거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절친 호흡을 같이 해왔다.

부인 김은영(48)씨와 2녀. ▲경북 고령(52) ▲대구 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청와대 정책실장

요직 거친 예산전문가

장병만 기획예산처장관

넓은 인맥과 호방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정통 예산전문가다.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발휘해 장관 후보로 일찍부터 거론돼 왔다. 일처리를 추진력있고 합리적으로 해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부인 양정수(53)씨와 1남 1녀. ▲전남 곡성(54) ▲광주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 ▲행정고시 17회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차관

공기업 혁신 등 추진

변양균 정책실장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업무를 꾸준히 해온 예산전문가다. 지난해 1월 기획예산처 장관에 오른 이후 부처 조직개편과 공기업 경영혁신, 정부 성과관리 등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목을 받았다. 부인 박미애(53)씨와 2남. ▲경남 통영(57) ▲부산고, 고려대 경제학과, 서강대 경제학 박사 ▲예산청 행정예산국장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대표적인 조사전문가

전군표 국제청장

행정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사무관 시절부터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조사통.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국제청과 '집권주체'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무관 시절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인 이미정(47)씨와 2남. ▲강원 삼척(52) ▲강릉고·경북대 ▲국제청 조사국장 ▲국제청 차장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교육 부총리 등 3개부처에 대한 개각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각내용과 관련해 당의 수용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 외면한 오만한 코드 인사”

輿論부서도 반발 목소리
한나라당 “청문회서 보자”

7·3 개각 파문이 정권권은 물론 교육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3 개각이 열린우리당 발전정책위원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성급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3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 부총리 지명자가 지방자치 전문가일 뿐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특히 지방선거 전 '세금 폭탄' 발언 등으로 민심 이반을 불렀다는 것이다. 또한 권오규 정책실장의 경제 부총리 임명도 이해하기 어려운 급속한 고속 승진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내 반발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개각을 실패한 코드인사로 규정, 인사청

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을 원내대표 대행은 “정부 정책의 혼란과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을 다시 기용한 것은 청와대가 민심을 다시 한번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이번 개각은 실패한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들도 “교육현실을 무시한 인사”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교조)은 “김병준 부총리 내정은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기초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김 내정자는 교육의 문외한으로 교육계와 지속적인 대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사회정반에 호응보다는 실망을 더 가져올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당정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계개편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